

코스피 2517.37 (-19.43)	코스닥 728.29 (-0.45)
금리 (국고채 5년) 2.573 (+0.003)	환율 (원·달러) 1453.50 (+22.20)



식품업계
AI·로봇 도입 등
푸드테크 고도화
03

트럼프 관세전쟁 시작… 韓 전자·車·배터리 등 직격타

4일부터 加·멕시코 수입품 25% 중국산엔 10% 고율 관세 적용

삼성·LG·기아·포스코 등 비상 현지공장 증설·생산 차질 우려 한국 무역흑자 타격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 시간)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정대로 강행했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도 '트럼프 관세'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됐다. 삼성전자와 LG전자, 기아자동차, 포스코 등 주요 기업들과 협력사들 다수가 멕시코, 캐나다에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어 앞으로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전방위로 확대된다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도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2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미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자국으로 오는 모든 수입품에 각각 25%,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3건의 행정명령에 1일 서명했고 이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캐나다산 에너지 자원에 대해서는 25%가 아니라 10%의 추가 관세만 적용한다고 적시됐다. 관세 부과에 따른 물가상승을 우려한 조치다. 캐나다와 멕시코 등이 관세 부과에는 강경히 대응하겠다고 보복 방침을 밝혔지만 보복에는 재보복한다는 내용도 행정명령에 포함됐다. 캐나다에 대한 행정명령

을 보면 "만약 캐나다가 이번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비슷한 조치를 취해 보복하는 경우, 대통령은 이 조치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관세를 인상하거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무엇보다 이번 조치가 지속될 경우 멕시코에 공장을 둔 한국 기업들도 함께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 기아, 포스코 등이 현지 공장을 가동하며 추가 증설하거나 신규 공장을 설립하면서 투자를 확대했다. 지난 2020년 1100만달러에 그쳤던 한국의 멕시코 투자는 2022년 3억9600만달러로 급증했다. 삼성전자는 멕시코 캐레타로와 티후아나에서 가전 공장과 TV 공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LG전자는 레이노사(TV), 몬테레이(냉장고), 라모스(전장) 등에 생산 기지를 두고 있다. 기아 멕시코 공장에서는 지난해 1~11월 K3 17만 5000대, K4 6만4000대, 투싼 1만4000대 등 총 25만3000대가 생산됐고, 이 중 K3 12만8000대가 미국으로 판매됐다. 현대모비스와 현대트랜시스도 생산공장을 가동 중이며 여타 공급망 참여기업들도 가동 중이다.

캐나다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과 스텔란티스의 합작공장이 배터리 모듈을 양산하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GM(제너럴모터스)과 함께 배터리 양극재 합작공장을 현지에 건설 중이다.

〈2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입춘대길 건양다경'

입춘을 하루 앞둔 2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인천항교에서 유림들이 입춘첩을 붙이고 있다. 입춘첩에는 봄이 시작되니 경사스러운 일을 바란다는 의미를 담은 '입춘대길'(入春大吉), 건양다경(建陽多慶) 글귀가 담겼다. /뉴스

벚꽃추경 가시화… 불황에 단비 내리나

정부-정치권 추경 공감대 형성
與 '李, 여야정협의체 참여' 요구

국민의힘이 2일 여야정 협의체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추경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신경전을 벌이던 여당이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대내외 불안 요인으로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경기 활성화를 위한 '벚꽃추경' 편성 논의를 시작할지 주목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재명(민주당) 대표가 민생에 진심이라면 여야정협의체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추경 편성이 정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



내대표는 "당리당략적 예산이 아니라 민생안정과 취약계층 보호, 경제 활력을 위한 예산 항목에 국한해 논의해서 (추경안을) 확정한 다음 정부로 하여금 추경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추경의 속도를 내는 데도 중요하고 각종 정책 논란을 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태도도 다소 달라졌다. 최상복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4분기에 성장과 고용이 부진하고 수출 증가세도 둔화되는 흐름으로, 미국 신정부의 정책 전환이 점차 구체화되며 대외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면서 추경 재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서예진 기자 syj@

메트로 한줄뉴스



▲이재명 "경호처장 공관, 해병대 사령관 공관으로 복원하자"

▲이준석 "민경욱, 부정선거 공개 토론하자… 무식하면 용감하기라도 해야"

/사진 뉴시스

▲ 민주, 지명직 최고위원 흥성국 내정… "경제 위기 극복"

▲ 조국혁신당 "내란 종식 위한 '원탁회의' 제안… 민주 우클릭 우려 있어"

▲ 권성동 "마은혁 권한쟁의심판 절차적 하자… 이재명의 추경 주장은 악어의 눈물"

▲ 해군기동함대사령부 1일 창설… 해상기반 한 국형 3축체계 핵심

139명이 만들어낸 '딥시크' 돌풍

AI 천재 키운 中… 한국, 인재육성 도마위

中 정부 'AI강국' 목표 200조 투자 대학·산학 협력으로 인재유치나서 韓, 양성규모 초점·지원부족 한계

유학 경험이 없는 젊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개발되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인공지능(AI)기업 딥시크(DeepSeek)의 등장 이후, 국내 AI 인재 육성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AI 분야의 우수 인재가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의학대학으로 향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함에도, 정부 정책이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일 홍콩 SCMP는 AI 추론 모델 '딥시크R1' 관련 논문에 200여 명의 젊은 중국 과학 인재들이 공동저자로 참여했다고 보도했다. 총 139명의 인력으로 알려진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는 대학을 갓 졸업한 20대 초반부터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AI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이들 대부분이 칭화대, 베이징대 등 중국내 대학 출신이라는 점이며, 대학원 역시 마찬가지다. 딥시크는 설립 5개월 차인 2023년 11월 첫 모델인 '딥시크 코더'를 개발했고, 이어 지난해 '딥시크-V2'와 '딥시크-V3' 모델을 선보였다.

'딥시크 쇼크' 이후 국내 정치권은 다양한 주장과 비판을 쏟아냈다.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AI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요청했으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0조원 규모의 AI 및 민생 추경을 긴급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SNS에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가 세계 AI 시장의 지각변동을 일으켰다"며 "연구 인력 139명뿐인 작은 기업이 적은 비용으로 이뤄낸 혁신"이라고 평가하고, 동시에 AI 인재 1만 명 육성 계획을 밝혔다.

이처럼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으나, 정작 AI 업계는 시큰둥한 분위기다. 한 AI 기업 관계자는 "딥시크가 적은 비용에 개발되었다고는 하지만, 연구에 참여한 개개인 인재는 사실 국가 차원의 천문학적 투자를 통해 배출된 천재들"이라고 꼬집었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AI 인재를 육성하기 시작한 것은 2017년 국무원이 발표한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계획' 이후다. 2030년까지 세계적인 AI 강국이 되겠다는 목표 아래 ▲AI 핵심 인재 1만 명 육성 ▲AI 관련 학과·연구소 확충 ▲산학 협력 강화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했다. 이어 중국 교육부는 2018

년 'AI 인재 양성계획'을 발표했으며, 칭화대·베이징대 등 주요 대학들은 AI 학부 및 대학원 과정을 신설해 글로벌 AI 인재를 유치하기 시작했다.

더 나아가 2020년에는 'AI+X'라는 융합 교육 모델을 도입해 다양한 학과에서 AI를 접목하도록 했고, 2021년 이후 '14차 5개년 계획(2021~2025)'에선 AI 인재 육성을 과학기술 혁신의 핵심으로 설정했다. 2023년부터는 'AI 2.0' 전략도 추가했다.

중국 정부의 투자 규모도 막대하다. 국가 차원의 투자만 추려도 이미 200조 원에 달한다.

이러한 대규모 투자와 지원의 성과로, 중국은 현재 AI 논문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표하는 국가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AI 인재 육성책이 산학 협력과 긴밀히 연결되지 못하고, '인재 양성 규모'에만 초점을 맞추는 탓에 기초 역량과 이론 교육이 부실해지는 문제를 거론한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연구 자율성과 연구비 이용 구조라는 지적이다. 연구 과정에서 실패는 필연적이므로 장기적 투자와 지원이 필요한데, 성과 중심의 연구비 지원이 혁신적인 연구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김서현 기자 seoh@